

일본의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과 전망

함철훈, 이병운, 양맹호, 김현준,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주”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프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련정책이 변화되며 그 영향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 TMI 원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규제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거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체제가 재정비되는 사례가 바로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1995년 12월 고속증식로인 “몬주”에서 발생한 나트륨 누설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킴으로써 경수로에서 플루토늄의 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본의 원자력정책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으로써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유사한 환경에 있는 우리 나라도 사태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원자력정책원탁회의 설치와 원자력 정보공개¹⁾

가. 설립배경

이제까지 일본의 원자력정책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① 정책결정과정의 불투명성, ② 계획과 현실과의 괴리, ③ 국가와 원자력사업자 사이의 책임소재 불분명, ④ 원자력입지개발의 추진방향에 대한 불신 등이 오랫동안 잠복되어 왔는데다가, 원자력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①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② 이를 뒷받침하는 원자력 개발체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불신 증대되어 왔다. 그런데 1995년 12월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몬주”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신설되었다.

나.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원자력정책원탁회의는 최초 6명의 조정위원(modulator)으로 구성되었으나, 그후 원자력위원 및 각계인사 10여명이 추가되어 11차례의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원탁회의의 운영과정에서 원자력내파와 원자력위원이 대립하는 사례가 빈발함으로써 원자력에 관하여 식견과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서도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원탁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

원탁회의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회의의 논의과정이 전면 공개되었으며, 이와 함께 원탁회의는 ① 매 회의를 마다 일반인의 방청신청을 받아들이고, ② 의사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③ 비디오 공개, ④ CATV 등에서 방영을 통하여 일반인 특히 젊은층을 상대로 원자력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 노력하였다.

다.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주요 논의사항

원자력원탁회의에서는 에너지를 둘러싼 문제 및 원자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안전성은 무엇보다 ① 정보공개, ② 입지지역과 소비지의 관계, ③ 환경문제, ④ 에너지교육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① 원자력과 사회(특히, 안전과 안심), ② 에너지와 원자력, ③ 원자력과 핵연료주기, ④ 원자력과 사회의 관계가 주로 논의되었다.

(1) 제1차원탁회의 - 제4차원탁회의

제1차원탁회의부터 제4차원탁회의까지는 특정한 주제없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에서는 주로 에너지를 둘러싼 문제 및 원자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안전성은 무엇보다 ① 정보공개, ② 입지지역과 소비지의 관계, ③ 환경문제, ④ 에너지교육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2) 제5차원탁회의 - 제11차원탁회의

제5차원탁회의시부터는 주요 논점을 ① 원자력과 사회(특히, 안전과 안심), ② 에너지와

1) 이 부분은 村田貴司(무라타 다카시), 原子力工業, 97년, 3월호 54 - 59면, 원자력공업, 96년, 12월호 36 - 39면 및 Internet <http://www.sta.go.jp/>를 열람하여 정리하였다.

원자력, ③ 원자력과 핵연료주기, ④ 원자력과 사회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매 회의마다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① 제5차원탁회의 : 원자력은 “안전”인가? “안심”인가?(원자력과 사회 : 안전과 안심)
- ② 제6차원탁회의 : 원자력의 대체에너지는 무엇인가?(에너지와 원자력)
- ③ 제7차원탁회의 : 원자력,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원자력개발이용정책과 핵연료주기)
- ④ 제8차원탁회의 : 원자력은 무엇을 초래하는가?(원자력과 사회의 관계)
- ⑤ 제9차원탁회의 : 원자력개발이용의 미래는?(핵연료주기)
- ⑥ 제10차원탁회의 : 원자력은 무엇을 초래하는가?(원자력과 사회의 관계)
- ⑦ 제11차원탁회의 :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너지문제와 원자력)

라.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원탁회의의 제언 및 원자력위원회의 대응

원탁회의는 11차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원자력위원회에 대하여 2차례의 제언(제1차 제언 : 1996년 6월 24일, 제2차 제언 : 1996년 10월 3일)을 행하였으며, 이러한 제언에 대하여 원자력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제1차 대응 : 96년 9월 25일, 제2차 대응 : 96년 10월 11일)를 채택하였다.

(1) 제1차제언 및 대응

원탁회의 제언내용	원자력위원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에 관한 정보공개 및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원자력위원회에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민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위원회 산하의 전문부회보고서 작성시 국민의견 수렴 - 보고서작성(안)을 일정기간 공시하여 필요한 의견 수집하되 ① 반영할 의견은 보고서에 채택하고, ②불채택 의견은 이유를 붙여 보고서에 공개함

(2) 제2차 제언 및 대응

원탁회의 제언내용	원자력위원회 대응
<p>1. 원자력 위상의 명확화</p> <p>앞으로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수요신장 및 성에너지의 진전가능성과 실현성, 비화석연료의 공급확대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철저히 행해지고, 그러한 전제하에 원자력의 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 <p>2. 핵연료주기에 대한 제언</p> <p>① 총괄 : 핵연료의 제조, 재처리 내지 최종폐기물의 처분에 이르는 핵연료주기에 관하여 이제까지의 회의중에 자원/환경 양면에서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핵연료주기의 전개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p>	<p>1. 당위원회로서는 신원탁회의의 개최 등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 및 원자력에 관하여 다각적 논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통산상의 자문기관인 종합에너지조사회의 검토 및 관계행정기관의 진지한 노력을 촉진한다.</p>

원탁회의 제안 내용	원자력위원회 대응
<p>②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입지지역과의 협의 이외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현실적·합리적인 관리대책을 신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을 강력히 요청한다.</p> <p>③ 플루토늄의 경수로 이용 : 현재 핵연료주기의 최종단 분야는 플루토늄이며, 정부가 경수로 이용(플루서멀)에 관하여 그 목적 및 내용을 입지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도 가능한 한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희망한다.</p> <p>④ 고속중식로문제 : 고속중식로는 향후 원자력의 핵심적 요소이며, 몬주의 취급을 포함한 장래의 고속중식로 개발의 기본개념에 관하여 정부가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p> <p>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취급 : 후행핵주기정책의 확립은 원자력의 종합적 안전성의 향상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층처분실시의 순서 확립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구체적 처분대책을 가능한 한 신속히 책정하고, 또한 그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주체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희망한다.</p> <p>3. 원자력 안전화보 및 방재체제가 확립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정부는 원자력방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계 각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법을 명확히 한 확실한 방재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강력히 요청한다.</p> <p>4. 입지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원자력의 혜택을 입은 전력소비지주민들이 입지지역과의 교류·대화 등을 통하여 입지지역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자세를 확립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p> <p>5. 신원탁회의의 제안 원탁회의는 원자력 관련 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국민으로부터 널리 구하여 논의를 행하였으며, 원자력행정에 대한 제언을 행하는 제도로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참가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다만, 이제까지 행해진 원탁회의는 구성·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신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p> <p>① 구성 : 조정위원, 원자력위원, 임시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다.</p> <p>② 멤버선정 : 조정위원, 원자력위원, 임시위원은 각계각층에서 원자력에 관한 식견과 관심을 가진 자를 선정한다.</p> <p>③ 회의운영 : 조정위원은 매회 의안의 선정, 의사진행책임을 가진다. 회의는 일정기간 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p> <p>④ 제언 : 조정위원은 일정시기에 신원탁회의의 논의를 총괄하여 이를 원자력위원회에 제안한다. 원자력위원회는 이 제언을 원자력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여 신원탁회의에 회답한다.</p>	<p>2. 핵연료주기의 전개는 일본의 자원적 제약 및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고 판단되며 앞으로 조정위원의 제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제시책을 추진한다.</p> <p>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 장기적 대응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도 합리적 해결책을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종합에너지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착업도 고려하면서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방향을 시급히 확정한다.</p> <p>② 플루토늄의 경수로 이용 : 종합에너지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토작업을 고려하면서, 그 목적 및 내용을 시급히 확정하고 관계행정기관과도 연계하여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p> <p>③ 고속중식로 : 몬주의 나트륨 누설사고의 원인규명 및 안전점검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면서, 몬주의 취급을 포함한 장래의 고속중식로 개발의 기본 방침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행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 "고속중식로간담회"를 설치한다(1996년 11월 설치를 결정)</p> <p>④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취급을 포함한 후행핵주기정책 : 현재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후행핵주기대책전문부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간담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 실시주체의 설립 등에 관한 처분대책의 구체적 대책을 가능한 한 신속히 책정하고 이를 알기 쉬운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한다.</p> <p>3.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원자력방재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역할 및 협력을 명확히 한 강력한 방재대책의 확립을 목표로 관계행정기관의 대처를 강화·추진한다.</p> <p>4. 원자력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정부의 입지지역에 대한 대응이념의 확립, 정부가 일체로 된 지역진흥책 등에의 대처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유통, 의사소통을 더욱 촉진한다.</p> <p>5. 원자력에 대한 투명성 및 알기 쉽도록 설명할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 각계각층의 참가를 유도하여 다각적 논의를 행할 원탁회의의 개최하는 것은 폭넓은 지지를 얻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조정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행한 후 신원탁회의를 개최한다.</p>
1996년 10월 3일	

3. 일본의 원자력행정체제의 개혁과 전력개편

가. 원자력행정체제의 개혁

(1) 배 경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그동안 원자력정책의 수립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종전의 원자력 개발체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불신 증대되는 과정에서 “몬쥬”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원자력 개발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원자력 행정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 과제로 되고 있다.

(2) 원자력행정체제의 개혁방향

현재 일본원자력행정체제의 근간인 1980년(소화55년)체제(중앙정부 주도체제)는 차츰 붕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및 지역주민의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지방자치제의 정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하였으며, ② 이제는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대적 상황이 종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민간원자력사업자들은 과거와 같이 단일한 정부의존적 경향을 탈피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할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등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나. 전력체제 개편(수직적 통합분리)

(1) 문제의 발단

OECD는 금년 5월 개최될 각료이사회에 규제완화권고(안)를 제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일본전력회사의 발·송전분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본정부의 佐藤 통산상이 자원에너지청에 발전·송전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개편문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수직적 통합분리의 의의 및 목적

“수직적 통합분리”라 함은 전력시장을 자유화할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을 바탕으로 최후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망(network)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통합분리의 목적은 독점화된 송전망과 배전망에 제3자가 평등한 조건하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수직적 통합분리의 일본에 대한 적용 가능성

영국은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하여 전력요금도 실질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력수요의 지속적 신장 예상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효율과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과 같은 자원빈국에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은 원자력과 같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전원개발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4. 일본의 원자력 국제협력정책과 Asiatom

가. Asiatom의 설립 구상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협력을 위한 협의체 또는 공동체의 설립은 일본 동경대학의 스즈키(Atsuyuki Suzuki)교수에 의해 1970년대 초반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²⁾, 일본이 이에 적극성을 보여 각종 세미나 및 회의 등을 주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공동체 설립에 대한 초기의 구상은 주로 지역적 안전조치체제 구축 및 비핵지대에 초점이 모아졌으나, 일본은 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역핵주기센터의 설립, 안전 분야의 협력, 원자력 기술협력에 간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³⁾

나. 기본취지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원자력 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어려움, 원자로 안전성 및 규제기준의 상이성, 상호 안보이익의 상충 및 침략관계에서 비롯된 역사적 감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역협력체의 개념은 이러한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 취지는 ① 경제협력 :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원의 공급을 통한 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② 핵비확산 : 지역에서 선출된 인력에 의해 특수핵물질의 생산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IAEA의 안전조치 지원을 받는 핵물질 통제 제도를 설립하며, ③ 방사성폐기물 처분 : 역내의 국가들에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및 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여 역내 국가에 이 시설을 제공하며, ④ 원자력 안전성 : 건설적인 원자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기준 하에서 역내 원자력 발전시설을 규제한다는 것이다⁴⁾.

다. Asiatom 설립 조약(안)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가네코 교수를 중심으로 일본국제포럼은 1996년 6월 Asiatom 설립 조약(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조약(안)에는 ① 주요 목적과 원칙, ② 적용지역, ③ 가입국, ④ 구성, ⑤ 관련 체제 및 기관, ⑥ 재정·분담금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 국제 포럼이 제안한 Asiatom 설립조약(안)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나, 후행핵연료주기 개발에 대한 제약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일부 내용들은 보완되어야 한다.⁵⁾

2) Fei, Edward T., "Nuclear Energy and Nuclear Fuel Cycle Issues in East Asia", Northeast Asian Cooperation Dialogue, January, Beijing, China, 1996.

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A Study on the Nuclear Foreign Policy Analysis)(KAERI/RR-1679/96, 89면 참조.

4) Choi, Jor-Shan, "An East Asian Regional Compact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Energy Workshop of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September 11-12, Seoul, Korea, 1996.

5) 이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상기 원자력 대외정책 연구, 93 - 94면을 참조할 것.

5. 결 론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까지 미국, 러시아, 일본과 같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된 일은 없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하여는 보다 합리화된 안전대책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1996년 12월 원자력법 개정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에서 분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Asiatom의 설립은 원자력 이용개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원자력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주변국들의 원자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시 적극 대처함으로써 일본의 원자력 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가 깃들여 있다. 또한 다자간 안전조치 체제를 통하여 일본의 핵투명성을 주변국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국의 후행핵연료주기 활동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주변국의 원자력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Asiatom의 설립이 우리 나라의 원자력 이용개발 확대, 핵연료의 공급보장 및 북한의 핵개발 의혹 감시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망된다.

향후 일본에서는 원자력개발이용이 민간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데 그 이유는 ① 전원3법에 의한 정부의 각종 교부금만으로는 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② 원자력행정체제의 개혁 움직임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본정부는 플루토늄핵주기정책만은 정부 주도로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감지되기 때문에 그 추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